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2021지역언론 토크\_1월4주(2)>

## 선거보도 막 올리면서 정당 오기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 신경 써야!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이 4·7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예비후보를 확정했습니다. 다음날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이 사실을 알렸는데요. ‘막 올랐다’, ‘라인업 나왔다’ 등으로 표현하며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왔음을 알렸습니다.

### 군소정당 홀대 또다시 반복 정당명 잘못 쓰거나 언급조차 안 하거나

선거보도의 목적이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 데 있는 만큼, 언론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27일, 부산일보는 후보의 정당명을 오기했고, 국제신문은 군소정당·무소속 후보를 제외했습니다.

부산일보는 <11인의 ‘부산 대전’ 막 올랐다>(1/27, 1면)에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인사들을 정당별로 분류해 소개했는데요. 거대양당의 향후 경선 일정이나 선거 전략 등을 주요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군소정당과 무소속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이름만 한 차례 언급했습니다.

그마저도 진보당 노정현 후보를 ‘정의당 노정현 후보’라 기술해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했는데요. 상대적으로 유권자에게 생소할 뿐 아니라 언론이 잘 조명하지 않는 군소정당 후보에 대한 모처럼의 언급이 부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어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제신문은 <與 3파전, 野인6명 압축…‘보선 라인업’ 나왔다>(1/27, 1면)라는 제목에서부터 이번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라인업’을 철저히 거대양당의 관점에서 구성했는데요. 기사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의 향후 일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진보당 노정현 후보와



**국제신문, 성평등 공약 점검 시의적절  
부산일보, 성추행 사건 반응 나열 의미 없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이 4·7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의 예비후보자들을 결정한 다음 날 국제신문은 <성비위로 치르는 보선인데… 男후보 성평등 공약 안 보인다>(1/27, 3면)를 통해 여야 후보의 성평등 공약을 점검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전직 부산시장의 성추행으로 발생한 선거라며 ‘성인지 감수성’은 차기 시장이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 중 하나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어 국민의힘당 예비후보들이 교통, 일자리, 주거, 경제 등에 대한 공약을 내놓으면서도 공직자의 성범죄에 대해선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꼬집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예비후보에 대해서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범죄를 ‘잘못’으로 지칭하는 등 사죄의 변은 세 줄에 그쳤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여야의 예비후보가 윤곽을 드러낸 바로 다음 날, 국제신문은 성평등 공약을 점검함으로써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분명히 했습니다.

## 성비위로 치르는 보선인데… 男후보 성평등 공약 안 보인다

박형준, 성범죄 근절 정책 전무  
이진복 부라부라 “위원회 설치”  
박성훈, 부산경제 현안에 집중  
與후보 김영춘 ‘잘못 사죄’ 그쳐  
이연주·박인영 女후보만 적극적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전직 부산시장의 성추행으로 발생한 선거다. 그런 만큼 ‘성인지 감수성’은 차기 시장이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 중 하나다. 성범죄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은 성범죄 근절 대책, 성평등 공약에 집약된다. 하지만 부산시장 선거에 나선 남성 후보들은 관련 공약에 소극적인 반면, 여성 후보들만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 대립했다.

**국민의힘 남성 후보 중 공직자의 성범죄 근절과 관련한 대책을 발표한 후보는 없다.**

박형준 등이다. 교수는 지금까지 5개의 공약을 내놓지만, 교육·일자리·주거정책 등이 전부다. 정치권 내 성범죄가 나타나고 있지만, 박 교수는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공직자의 성범죄에 대해 사실상 침묵에 가까운 행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치 신인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도 부산 경제에만 집중했다. 그가



커지는 성 이슈  
보선 변수 되나

정의당, 비대위 설치·운영  
與 “박원순 피해자에 사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젠더 이슈’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남 국민권익위원회가 고백률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성희롱으로 인정한 데다 정의당 김동원 대표의 성추행 사건도 연이어 불거진다.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의당은 당장 4·7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또 정의당은 비선(北線)의회의를 구성했다. 정호진 수석(北線)은 국회에서 연막회의의 지휘를 맡고 있다. “책임있는 사내 수습과 해임에 대해 의원과 대표단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의는 윤근미 원내대표와 김윤기 당 대표 직무대행이

26일 발표한 1호 공약은 부산 경제 대책 명이다. 박 전 부시장은 지난 정의당 당 대표의 성추행 문제를 언급했지만, ‘남은 정치 프레임 의욕’에 그쳤다.

출마를 오래 준비한 이진복 전 의원마저 대주 발표에는 7개 공약에 성범죄 근절 대책은 없었다. 정의당 성추행 사건이 보도되자 이 전 의원은 부라부라 지난 페이스북에 시장 직속의 양성평등 전담기구와 신화 공공기관 내 독립된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박인식 전 의원은 고백률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를 수사하는 경찰 현대만 꼬집었다. 가장 젊은 후보인 현상호 LFP에 나지 대표는 3호 공약에서 보육, 주택공급 확대 등 여성정책에만 집중했다.

지방 소속 단체장의 귀환 사유로 발생한 보궐선거에 출마를 낸 민주당 후보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민주당 김광중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1호 공약은 가계신용량 개선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2일 출마선언식에서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범죄를 ‘잘못’으로 지칭하는 등 사죄의 변은 세 줄에 그쳤다.

여야 모두 여성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성범죄 근절에 목소리를 높이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이연주 전 의원은 2호 공약으로 ‘부산 성폭력 제로(0) 도시’를 발표했다.

이 전 의원은 >부산시 직속 성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 > 기존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의 발전적 흡수 > 아동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확대 > 발걸이 안전환스

미트 안전도시 확대 등을 공약했다. 아직 공약을 안 낸 민주당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의장은 지난 19일 출마 선언문에서 정치인의 성범죄를 정면으로 잡았다. 박 전 의원은 “오거돈 시장 성추행과 사비로 인한 시장공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죄송하다”며 “기관장과 고위직 공직자들, 특히 선출직 공직자들의 성비우는 특별히 무겁게 책임을 맡겠다”고 정면의 손해배상 도입까지 거론했다.

김해정기자 call@kookje.co.kr

▲ 국제신문, 1/27, 3면

- 3 -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들의 성평등 공약을 점검한 국제신문과 달리, 부산 일보는 <‘김종철 성추행’ 반응 극과 극>(1/27, 3면)을 통해 예비 후보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는 데 주목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한 것과 달리 부산민주당은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퇴가 재소환 될 수 있기에 ‘입을 닫은 모습’이라고 해석했는데요.

‘김종철 성추행’ 사건에 대한 정치인의 반응을 열거하는 가운데, 박인영 예비 후보에 대해서는 ‘여성인 박인영 예비후보 역시 …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성별을 강조했는데요. 이는 성평등 인식이나 관련 정책 능력이 여성 후보에게 특별히 더 필요한 것인 양 강조함으로써 기존의 성차별적 편견을 강화했습니다.

### ‘김종철 성추행’ 반응 극과 극

민주당 ‘오거돈 소환될라’ 무반응 국민의힘 “엄중한 심판율” 공세 박형준, 역풍 맞을라 말 아껴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을 두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여야 예비후보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린다. 이번 사태를 대어 공격의 호재를 삼으려는 국민의힘 후보들 간에도 미묘한 대응 차이가 감지된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은 전날 이어 26일에도 이번 사건에 대해 입을 닫은 모습이다. 중앙당 차원에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부산 민주당에서 관련 반응이 나올 경우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퇴가 재소환되면서 ‘성추행 단죄’가 선거 정점으로 재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춘 예비후보는 전날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자신의 SNS에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악선례’라고 한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 올해 20주기를 맞은 이수현 의인의 추모비에 현화한 사실 등을 알렸을 뿐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여성인 박인영 예비후보 역시 정부의 ‘연이지 추진비례 보상’에 관한 지지 메시지를 연이어 발신하고 있지만, 이 사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긴급 면석회의에서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 논쟁에 앞서 참석자들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있다. 김중호 기자 kimjh@

간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최근 가덕신공항에 대한 당 지도부의 발언으로 공자에 몰렸던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은 신속하게 관련 메시지를 내고 이번 선거가 민주당 소속 시장의 성추행으로 빚어졌다는 점을 일제히 부각시켰다.

이진복 예비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인화정, 오거돈, 박원순, 김종철 등으로 이어지는 좌파권력자들의 상변치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며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가짜 인권의자들에게 대한 엄중한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되면 직속의 독립된 양성평등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해 ‘상변죄 제로 부산’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반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박형준 예비후보는 이번 사태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는 등 거리 두기를 하는 모습이다. 자신에 대한 이 예비후보 등 후보자들의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괜히 추가 공격의 발미를 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전성훈 기자 ich@

▲ 부산일보, 1/27, 4면